

# 光州日뢖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1118호 1판 (음력 9월 27일)

## 내고향 농촌이 울고있다

#### 농업 위기 '농도 전남'의 아픔

전남을 비롯한 한국 농업이 위기를 맞 고 있다. 식량자급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비료를 비롯한 농자재값은 매년 오르는데 도 농업 소득은 세계무역기구(WTO) 출 범(1995년) 이후 20년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농촌에 젊은 일꾼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실정 임에도 FTA(자유무역협정)가입에 '개 발도상국 지위 포기'까지 정부의 개방 농 정은 갈수록 속도를 내면서 농민들 가슴 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정부의 농업 활성 화 대책이 우리 농업을 지켜낼 수 있을 지 불안하기만 한 상황에서 자칫 내 고향 농 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지 우려의 목소 〈관련기사 3면〉 리도 커지고 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농업인 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WTO에서 농업분 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전남 농업은 고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전남도내 인구 186만5000여명 중 16.4%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 농가인구 (30만6000명)는 전국 농가인구가운데서는 13.2%의 비중을 차지, 경북에 이어 전국 2위에 머물고 있다. 농업에서 미래먹거리를 찾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한 때 20%의 높은 비중으로 '농가 인구 전국 1위'에 올라섰던 기록은 경북에 넘겨준지 오래다.

또 88만5900t의 식량작물을 생산해 전국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등 식량 공급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지만전체 농가 중 1억 이상 고소득을 올리는

젊은 일꾼들 일자리 찾아 도시로 … 인구 급감에 고령화율 전국 최고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눈앞 … 개방 농정에 농심 무너져

농가는 전남에서 5027명에 불과하다.

전남 뿐 아니다. 전국 농민들의 가구당 농업소득도 비슷하다. WTO 출범 당시 연간 1047만원에서 지난해 1292만원으로 정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농가 평 균소득도 4206만원(2018년)으로 도시근 로자 가구 평균 소득(6482만원)의 6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쌀 재배 농가의 순수익도 감소세다. 2000~2018년 10a(아르=100㎡)당 쌀 소 득은 연평균 0.6%, 순수익은 연평균 1.5% 감소했다. 이러다보니 농업에서 미래를 만 들겠다는 젊은층을 찾아보기도 쉽지 않다.

전남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만 41만 9813명(9월 기준)으로 고령화율이 22.5%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노인인구가 30%를 넘는 지역도 고흥(39.5%)을 비롯해 담양(30.3%), 곡성(34.7%), 구례(32.9%), 보성(36.8%), 장흥(32.7%), 강진(33.4%), 해남

(31.1%), 함평(35.0%), 완도 (31.1%), 진도(32.7%), 신안 (34.6%) 등 12곳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도 지난해 농촌 인구 231만5000명 중 65 세 이상 노인(103만5000명) 비율은 44.7%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개도국 지위까지 포기하 게 되면 주요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대폭 낮아지고 보조금도 축소될 수 밖에 없어 전남의 쇠락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 (영암·무안· 신안)도 24일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농산물 관세 인하와 보조금 축 소로 국내 농업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며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농도 (農道) 전남'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 는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 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전남도 차원에서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준 비해야 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지 대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

24일 오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각국 참 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5·18 진상조사위 연내 출범 '청신호'

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군시설 주변 소음보상법도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 과함에 따라, 연내 진상조사위 출범에 청 신호가 켜졌다. 또 군사기지·군사시설 주 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안(군소음 보상법)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 피해 주민이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됐다.

〈관련기사 2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발의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조사위원 자격요건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

을 추기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여야의 물 밑 합의가 있어 이달 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개 정안의 본회의 통과 이후, 곧바로 조사위 원 추천에 나선다면 올해 내에 진상규명위 원회가 출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조사위원 재추천 요구를 1년 이상 미루며 사실상 진 상조사위 출범을 막어왔다는 점에서 개정 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즉각적인 조 사위원 추천에 나설 것인지는 미지수다.

5·18 진상조사 특별법을 최초 발의했던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5·18 진상 규명 특별법을 발의한 지 2년 3개월이 지 났고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604일만에 진 상조사위 출범의 길이 열렸다"며 "자유한 국당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이후, 조속히 조사위원 추천을 마무리해 연내에 진 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군소음 보 상법도 통과됐다.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서 법안이 통과·공포되면 1년 후부터 군 공항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 해(광주 등 대도시 85웨클 이상)에 주민 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하지 않 더라도 보상이 가능해진다.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1호 법안'으로 '군 용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법안'을 발의했던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군 공항 등 군사시설 소음 피해 보상 법안 통과에 무려 15년이 걸렸다"며 "보다 근본 적인 해결책인 군 공항 이전이 조속히 이뤄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정경심 교수 구속

2019년 10월 25일 금요일

### 법원, "혐의 소명" 영장 발부 건강 우려 받아들이지 않아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4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 전 장관일가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지58일 만이다.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조 전 장관까지 직접 겨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련기사 3면〉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지난 23일 정 교수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4일 0시 18분께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정 교수는 영장 발부에 따라 곧바로 절차를 거쳐 독방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 동양대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 발부는 지난 두 달 간 대대적으로 진행된 검찰 수사에 대한 사법부의 1차 판단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정 교수의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검찰은 그간의 수 사 정당성 논란을 다소 털어낼 수 있을 것 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커졌다. 검찰은 최대 20일간의 구속 수사를 벌인 뒤 정교수를 재판에 넘기게 된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10분 가량 면회했다. 법원이 정 교 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약 10시간 만 에 이뤄진 첫 면회다. /연합뉴스



